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과 수요자 만족도

유희정¹⁾

최진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16개 지방자치단체별 보육 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예산과 사업을 분석하고 보육시설장 330명과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328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008년 현재 전체 보육예산에서 지방정부들은 40.5%에서 83.2%까지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보육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보육서비스에 대해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보육 과정의 전문성,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지역별, 시설 유형별, 수요자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준보육과정운영과 보육시설평가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정보 제공과 인건비 지원에 대한 지역간 만족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또한, 인건비 지원 시설인가의 여부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컸고, 시설장과 학부모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 만족도

I. 서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구현되는 생활의 단위로서, 국가 및 보호자와 더불어 영아 및 유아를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영유아보육법 제 4조 2항, 유아교육법 제 3조)이 있다. 보육정책의 책임 주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인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

1)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2)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보육 예산에서 중앙정보보다 1.4배(2008년 기준)인 1조 9,550억 원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의 85%에 해당되는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결정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 보육정책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적인 운영의 틀이 결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작게는 10억에서 크게는 1,400억까지 자체 보육예산을 따로 편성하여 특수시책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 지방정부 특수시책은 지역 간 보육 인프라 및 운영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업 실태 파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보육 예산과 운영 및 관리 사업 현황을 파악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육사업의 수요자 지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을 단위로 수행되고 있는 보육 사업에 대해서 시설장과 부모의 인지 및 만족도를 분석한다. 특히, 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이 적정한 지원을 통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수요자들을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로 구분하여 인지 및 만족도의 차이 또한 분석한다.

II.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정책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업 현황

가. 일반 현황

보육시설 이용율은 전국 평균이 37.8%이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는 31.9%(인천)에서 57.5%(제주)로 이용율의 차이가 있다. 제주의 이용율이 가장 높고, 전북(53.7%), 전남(48.6%), 광주(46.4%), 충북(45.9%), 강원(43.3%), 경북(41.6%), 대구(40.5%)가 지방자치단체의 0-5세 아동의 40%이상이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반면 대전(34.2%), 경기(33.0%), 울산(32.1%), 인천(31.9%)은 35% 이하의 이용율을 나타낸다(<표 1>참조).

<표 1>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시설 및 평가인증시설(2007.12)

단위: 명,%

구분	어린이 집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	
	아동수	이용율	시설수	비율
서울	186,708	35.2	1,115	20.3
부산	62,059	38.4	305	19.0
대구	52,979	40.5	353	28.2
인천	49,206	31.9	281	19.7
광주	41,055	46.4	175	16.7
대전	31,063	34.2	275	24.5
울산	21,481	32.1	181	32.6
경기	242,511	33.0	1,082	13.2
강원	34,991	43.3	254	31.2
충북	39,537	45.9	165	19.5
충남	45,190	38.8	244	20.9
전북	54,693	53.7	430	33.4
전남	49,027	48.6	338	34.2
경북	58,540	41.6	264	18.1
경남	72,243	38.2	465	21.8
제주	21,132	57.6	115	27.3

* 아동합계(2007.12), 주민등록 아동 통계, 보육시설이용아동(2007.6. 6세 이상 방과후 아동 포함).

다음으로 보육시설의 질 관리와 관련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은 전체 시설의 20.3%이며, 국공립 및 법인 시설의 인증시설 비율이 민간 시설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증시설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1,115개)과 경기(1,082) 지역이다. 하지만, 두 지역은 보육시설의 절대 수 역시 많아서 지역 전체의 인증시설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전남(34.2%), 전북(33.4%), 울산(32.6%)이 인증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반면, 경기(13.2%), 광주(16.7%), 경북(18.1%), 부산(19.0%), 충북(19.5%), 인천(19.7%)은 2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인증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보육시설의 유형별 비율 역시 상이한데, 이들 시설을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로 구분하여 지역별 현황을 살펴봤다. 인건비 지원 시설은 국공립, 법인 및 법인의 시설³⁾과 민간장애아와 영아전담시설을 의미한다. 지

3) 국공립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과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을 의미한다. 법인 시설은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

원기준은 원장 인건비의 80%를 지원(21인 이상 시설)한다. 보육교사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영아반 2개 이상 보육시설에 한하여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농어촌지역 및 1세 이하 영아반은 1개반이라도 80% 지원)를 지원한다. 또한,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를 지원한다⁴⁾. 이 밖에 농어촌 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하지만, 시간제 보육교사와 출산휴가 대체교사 인건비⁵⁾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간제 보육교사와 출산휴가 대체교사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특수 시책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국공립·비영리법인, 민간(개인, 가정) 보육시설 중 시·도지사가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도 원장과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에게 월 지급액의 80%을 지원한다.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도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월 지급액의 80%(정부지원시설) 또는 월 100만원(민간지정시설)을 지원한다.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민간지정, 국공립 및 비영리사회복지법인 시설)에는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에 원장 및 소요현원⁶⁾에 대한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이 밖에 국공립 및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건비 지원 대상자는 지역에 따라 그 비율에 있어 차이가 나는데, 숫적으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수인 6,949명의 교사 및 시설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대전이 823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전체 교사 및 시설장 수 대비 인건비

치한 시설이며, 법인의(지원)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 중 인건비 국고지원시설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08보육사업안내).

- 4) 영아반의 경우 0세반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1세반은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2세반은 아동 7명을 기준으로 4명까지 지원한다. 유아반 교사는 3세반의 경우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8명까지 4세 이상반은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1명까지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08보육사업안내).
- 5) 2008 보육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출산휴가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 통상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대체교사를 채용할 경우 출산휴가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되, 보육시설에서는 이를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통상급여와의 차액 보전에 활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대체교사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 6) 2008 보육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원기준은 0세반의 경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1세반은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2세반은 아동 7명을 기준으로 4명까지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과 수요자 만족도

지원 비율은 제주(44.6%)와 전남(41.9%), 강원(40.9%)이 가장 높고 경기(11.8%), 인천(13.4 %), 대전(16.3%)이 가장 낮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지방정부별 인건비 지원유무별 교사/시설장수(2008)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시설	
	교사/시설장수	비율	아동수	비율
평균	2,192	27.5	17,896	31.2
서울	6,949	25.7	56,131	32.3
부산	2,392	27.8	18,576	32.6
대구	2,053	28.4	16,405	32.1
인천	962	13.4	7,275	15.1
광주	1,759	31.5	13,535	33.0
대전	823	16.3	5,763	18.7
울산	611	19.5	3,575	17.1
경기	4,528	11.8	36,596	15.3
강원	1,732	40.9	15,287	45.2
충북	1,420	31.2	13,885	36.6
충남	1,788	31.9	15,968	36.3
전북	2,243	31.0	18,199	36.0
전남	2,553	41.9	22,310	46.7
경북	1,726	22.4	14,223	25.4
경남	2,262	21.5	17,695	25.0
제주	1,269	44.6	10,908	51.8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육통계.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시설에 다니는 아동수는 서울이 56,131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이 3,575명으로 가장 적다. 하지만, 보육시설에 취원한 원아수에서 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원아수의 비율을 따져보면 제주가 51.8%로 가장 높고, 전남과 강원인 46.7%와 45.2%이다. 그리고 충북(36.6 %), 충남(36.3%), 전북(36.0%), 광주(33.0 %), 부산(32.6%), 서울(32.3 %), 대구(32.1%)가 32-36% 정도의 취원아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시설에 다니고 있다. 반면, 대전(18.7 %), 울산(17.1 %), 경기(15.3%), 인천(15.1%)은 20%에도 미치는 숫자의 아동들만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취원하고 있다.

나. 사업 현황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집행을 지방정부의 역할로 정의하는 경우⁷⁾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내의 수요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특수한 발전계획을 수립⁸⁾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정책을 기획·집행한다.

먼저 국고조보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국공립보육시설 및 영아와 장애아 전담시설 인건비,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과 차량운영비 및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중앙보육위원회 및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재교육 등의 업무, 그리고 평가인증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의 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고유 사무는 전적으로 지방비에 의존하는 특수시책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고보조 사업이 국공립보육시설 및 민간 영아전담시설, 장애아 전담시설에만 인건비 지원이 되는 데 반해서 여러 지방정부들이 영양사 및 취사도우미를 파견하거나 농어촌 시설의 차량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운전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은 당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실행되는데, 다문화 가정이 대다수 거주하는 지역일 경우 결혼 이민자 가족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에는 영유아의 취원을 돕기 위해 차량 유지비 또는 운전사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수 교육 이외의 보육 교사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보육시설단체가 기획한 교사 교육에 비용을 지원하는 일이지는 하지만, 순회 교사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영유아 보육과 같이 전문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서 보육 교사들에게 찾아가서 강의를 해 주는 교육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7) 광주시 보육아동 담당관의 업무정의에 따르면,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셋째아 보육료,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보육정보센터운영, 표준보육관리시스템 및 보육시설 통계관리,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특수보육시설 지정, 기능보강사업 등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http://www.gwangju.go.kr/>).

8) 서울시 보육담당관실 2008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여성을 위한 지원 책의 일환으로 영유아플라자와 키즈센터 건립, 보육시설 도우미제도나 보육료 지원 대상 사전 확인 시스템 개발·운영 등의 지역 자체 수요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과 수요자 만족도

<표 3> 지방정부 보육사업(2008)

구분	국고보조 사업 ⁹⁾	지방정부 특수사업(사례)	
보육료 지원	만 3·4세아 차등보육료	취업여성자녀, 조손가족 자녀, 결혼이민자 자녀, 셋째아 또는 셋째 이후자녀 보육료, 차등보육료 차액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인건비지원	종사자 인건비(국공립·법인, 영아와 장애아 전담, 시간연장 등)	기타 인건비 지원(영양사 및 취사도우미 파견, 간호사, 운전사 및 대체인력 인건비)	
시설	운영 지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각종운영지원금 지원(아동 간식비, 냉난방비, 건강검진비)
	기능 보강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국공립시설, 특수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차량 운영지원	
		시설확충(신축,공동주택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신축시설 및 민간 시설 장비구입 부지매입
	환경개선(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방역소독비	
인프라 구축	보육사업 행정지원 및 행정전산망 구축	회계프로그램운영비지원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육아카페 등) 운영	
	시설장·보육교사자격관리 (자격관리 사무국 운영)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종사자 연찬회 및 각종연수(전문강좌) 지원	
	보육프로그램개발 및 연구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 순회 교사제 운영	
	민간단체(보육시설연합회)지원	각종 행사 지원	
		각종 문화사업(시설이용아동 부모교육지원, 유아문화축제 또는 캠프)	
	평가 :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평가인증	평가인증실시 및 지원 (평가인증 사무국 운영)	문서인력 파견사업, 평가인증참여시설 각종 인센티브	

자료: 2008년 보육사업안내(여성가족부), 각 시도별 2008 특수시책사업현황.

9) 국고보조금 사업이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에 의해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가리킨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제 114조), 지방재정법(제19조)과 동법시행령(제26조 제1항),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보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이다.

2. 지방자치단체 보육 예산

국가 또는 사회가 보육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에 따라서 보육 재정 규모가 결정된다. 보육관련 세부 정책 및 소요예산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담하여 추진하는데, 2008년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1.4배 부담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비중이 더 크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중앙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을 기본으로 하고,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정책을 만들고 있다¹⁰⁾.

중앙정부에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일정 비율, 즉 서울은 10%~90%, 서울 이외의 지역은 40~60%의 재정을 분담한다. 이와 같은 국고보조사업은 영유아에 대한 (차등,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보육료, 국공립보육시설 및 영아와 장애아 전담시설 인건비,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과 차량운영비 및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이다.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중앙보육위원회 및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재교육 등의 업무, 그리고 평가인증업무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는 일정 비율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고보조 사업이 주로 보육료 지원(2008년 중앙정부 보육예산액의 57.0%)과 국공립보육시설 및 민간 영아전담시설, 장애아 전담시설 인건비 지원(2008년 중앙정부 보육예산액의 21.1%)에 집중되고 있고 전체 예산 중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 또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 지원은 국고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지방비 지원액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예산은 2008년 1조 9,337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육예산 총액은 2006년 1조 2,511억원에서 2년 사이에 6,826억원이 증가하였다. 개별 지방자치단체

10) 국고보조금사업이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에 의해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가리킨다. 국고보조금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제 114조), 지방재정법(제19조)과 동법시행령(제26조 제1항),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보다 국고보조금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과 수요자 만족도

들의 지방비가 지방자치단체별 보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지원항목에 따라 10-90%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를 가진 서울의 경우(2008년 83.2%를 지방비로 부담)를 제외하고는 15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예산 중 지방비의 비중은 40.5%에서 58.3%까지 분포되어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평균 부담률은 50.1%이다. 이와 같은 평균 부담률은 2006년 54.2%에 비해서는 감소된 것이지만 2008년 현재 전체 보육예산에서 지방정부들은 40.5%에서 83.2%까지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표 4> 지방비 예산액 및 비중(2006-2008)

단위: 백만원

구분	지방비		특수시책	
	예산액	전체예산중 비중	예산액	전체예산중 비중
서울	513,922	83.2	143,715	23.3
부산	77,862	41.5	7,002	3.7
대구	68,583	43.2	5,451	3.4
인천	64,806	47.5	11,952	8.8
광주	47,993	40.5	1,012	0.9
대전	49,695	49.7	14,033	14.0
울산	32,231	51.2	5,770	9.2
경기	406,029	58.3	92,663	13.3
강원	62,222	53.2	7,379	6.3
충북	69,614	53.8	12,053	9.3
충남	84,412	55.5	16,620	10.9
전북	103,080	54.3	16,304	8.6
전남	86,258	50.8	2,724	1.6
경북	93,231	53.3	13,590	6.8
경남	129,348	54.4	16,948	8.8
제주	44,480	54.8	7,739	9.5

자료: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정부와 공동 지원하는 데에 더 많이 사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에서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분담금을 제외한 예산이다. 전체 예산 중에서 지역의 수요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고유 사무 영역에 대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예산액의 크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편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의 비중이 작

을 수록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수한 지역 수요를 해결하는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국고보조 사업 비율이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로 전체 예산의 76.6%가 국고보조 사업에 할당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대전 86.0%, 경기 86.7%와 충남 89.1% 순이다.

그 다음으로는 제주 90.5%, 충북 90.7%, 울산 90.8%, 인천과 경남이 각각 91.2%고 전북 91.4%, 경북 93.2, 강원 93.7%순이다. 이 밖에 부산(96.3%), 대구(96.6%), 전남(98.4%), 광주(99.1%)는 95% 이상의 비용을 국고보조사업에 할당하고 있다. 역으로 지방정부별로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편성하는 특수시책에 대한 예산액 및 비중은 0.9%(광주)에서 23.3%(서울)에 이르기까지 22.4%의 편차가 있다.

또한 그 예산액 역시 서울시가 1,437억원을 지출하는 반면 가장 작은 예산이 편성된 광주시의 경우는 10억에 그치고 있다. 예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 다음으로 경기(약927억원), 경남(약169억원), 충남(약166억원), 전북(약163억원), 대전(약140억원) 순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만, 예산액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유아수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은 경우가 지역 사회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특수시책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체 예산에서 특수시책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지방정부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0%이상인 서울, 대전, 경기, 충남과 8-10%사이인 제주, 충북, 울산, 인천, 경남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역고유의 보육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조사 방법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6개의 지방정부별 보육시설유형별로 각각 40개의 어린이집-국공립(10개), 법인(10개), 민간(10개), 가정(10개)-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균등할당표출(quota sampling)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표집된 시설장에게 설문조사에 응답할 의사가 있는지와 학부모 1인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전화로 구두 약속을 받은 후, 응답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시설장에게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였다. 보육아동 부모용 설문지는 조사 협조와 관

련된 가정통신문과 함께 학부모용 설문지를 동봉하였다. 설문지 수거율은 약 30%였으며 유효 표본은 658개로 나타났으며 조사기간은 2008년 8월~10월이었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보육정책 평가자 현황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서울	71	10.8	시설	지원	324	49.2
부산	50	7.6		미지원	334	50.8
대구	37	5.6		계	658	100.0
인천	75	11.4	유형	원장	330	50.2
광주	27	4.1		학부모	328	49.8
대전	35	5.3		계	658	100.0
울산	37	5.6	부모	참석	193	62.7
경기	36	5.5		모임있으나불참	56	18.2
강원	46	7.0		모임없음	59	19.2
충북	41	6.2	어머니 직업	계	308	100.0
충남	31	4.7		전일제	160	53.9
전북	20	3.0		시간제	36	12.1
전남	30	4.6	무급가족일종사자	무급가족일종사자	14	4.7
경북	48	7.3		전업주부	87	29.3
경남	43	6.5		계	297	100.0
제주	30	4.6				
합계	657	100.0				

조사 대상자의 일반현황은 인건비 지원시설이 49.2%, 미지원시설이 50.8%이며, 어린이집 원장이 50.2% 학부모 49.8%이다. 학부모들의 경우 부모모임에 참석하고 전일제 직업을 가진 비율이 62.7%와 53.9%로 다소 높다.

2. 조사 내용 및 결과분석

부모용 최종 설문지의 문항구성(총 22문항)은 영유아 학부모의 특성(6), 보육정책(14), 정책 영향력(2)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모의 일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명목척도를 사용하였고, 학부모의 정책 인지도와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리커트(Likert)식 4점 척도를 사용했다. 시설장용 설문지의 문항구성은 수요자 집단간

비교를 위하여 시설의 일반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모용 설문지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원장용 최종 설문지의 문항구성(총 19문항)은 시설의 특성(3), 보육정책(14), 정책 영향력(2)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9〉 설문 조사 항목과 지표

구분	변수	지표	척도
인지도 만족도	예산	보육료	리커트4점
		인건비	
		운영비	
	운영 및 관리	교육/보육과정	
		교사전문성	
		보육시설평가인증	
		정보제공	
인적사항	부모	자녀 연령, 부모특성(연령,취업)	명목척도
	시설장	시설유형, 현원	

IV. 보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인지도와 만족도

1. 지역별 인지도와 만족도

보육정책 중 보육료 지원(평균 3.36점)과 보육시설평가인증(평균 3.25점), 인건비 지원(평균 3.01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운영비 지원(평균 2.72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낮다.

보육정책에 대해서 시설장과 부모가 아는 정도는 제주와 강원(각각 평균 3.12점)이 가장 높고 대전, 경남(각각 평균 3.09점), 울산(평균 3.06점), 경기(평균 3.04점)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충남(평균 2.90점), 전남과 경북(각각 평균 2.94점)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과 수요자 만족도

〈표 10〉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인지도

지역	구분	보육료지원	인건비지원	운영비지원	표준보육과정 운영	교사교육지원	정보	평가인증	전체
서울	평균	3.30	2.97	2.66	2.96	2.80	2.90	3.23	2.97
	사례수	71	71	71	71	71	71	71	71
부산	평균	3.40	2.96	2.65	2.88	2.86	2.84	3.22	2.97
	사례수	50	50	49	49	49	49	49	49
대구	평균	3.27	3.05	2.51	3.03	2.78	2.78	3.24	2.95
	사례수	37	37	37	37	37	37	37	37
인천	평균	3.32	2.85	2.74	2.89	2.83	2.85	3.16	2.95
	사례수	75	75	74	75	75	75	75	74
광주	평균	3.11	2.96	2.74	2.96	2.81	2.81	3.23	2.95
	사례수	27	25	27	27	27	27	26	26
대전	평균	3.49	3.14	2.91	3.00	2.66	2.97	3.49	3.09
	사례수	35	35	35	35	35	35	35	35
울산	평균	3.59	3.05	2.92	2.81	2.81	3.00	3.24	3.06
	사례수	37	37	37	37	37	37	37	37
경기	평균	3.47	3.00	2.72	2.86	2.92	3.06	3.22	3.04
	사례수	36	36	36	36	36	36	36	36
강원	평균	3.33	3.11	2.84	3.05	3.05	3.11	3.38	3.12
	사례수	46	46	44	44	44	44	45	44
충북	평균	3.44	3.02	2.63	2.85	2.70	2.95	3.05	2.95
	사례수	41	41	40	41	40	41	41	40
충남	평균	3.39	2.81	2.45	3.00	2.71	2.67	3.29	2.90
	사례수	31	31	31	30	31	30	31	30
전북	평균	3.10	2.90	2.79	2.90	2.95	2.85	3.25	2.96
	사례수	20	20	19	20	20	20	20	19
전남	평균	3.47	3.07	2.63	2.77	2.87	2.66	3.13	2.94
	사례수	30	30	30	30	30	29	30	29
경북	평균	3.21	2.89	2.63	2.90	2.90	2.79	3.25	2.94
	사례수	48	47	48	48	48	48	48	47
경남	평균	3.40	3.21	2.83	3.09	2.84	2.81	3.42	3.09
	사례수	43	43	42	43	43	43	43	42
제주	평균	3.45	3.24	2.93	3.17	2.93	2.79	3.34	3.12
	사례수	29	29	29	29	28	28	29	28
계	평균	3.36	3.01	2.72	2.94	2.84	2.87	3.25	3.00
	사례수	656	653	649	652	651	650	653	652
F값		1475	.779	.943	.600	.518	.958	.703	

1점: 전혀 모른다 - 4점: 잘 알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제2권 제2호)

다음으로 실시된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정책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후 계산되었다. 수요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소 불만족스러운 정도로 나타났다. 보육정책 중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와 표준보육과정운영(각각 평균 2.83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인건비(평균 2.22점)와 운영비 지원(평균 2.27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가 낮다. 보육정책에 대해서 시설장과 부모가 만족하는 정도의 지역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지만 인천(평균 2.73점)과 경기와 대구(각각 평균 2.67점), 부산(평균 2.62점), 서울(평균 2.60점)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남(평균 2.35점)과 충남(평균 2.45점)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과 정책 영역에 따라서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제주와 인천, 경남지역 수요자들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각각 평균 3.08점, 3.04점, 3.00점)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평가했고, 경기지역 수요자들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평균 3.03점)에 대해서, 제주 지역 수요자들은 표준보육과정운영(평균 3.08점)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충남과 충북지역 수요자들은 인건비 지원(각각 평균 1.91점, 1.97점)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했고 충남지역 수요자들은 운영비 지원(평균 1.95점)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하였다.

인건비 지원 정책과 표준보육과정운영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먼저, 인건비 지원 정책은 조사 대상이 된 정책 중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전체 평균 2.22점)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충남(1.91점)과 충북(1.97점), 강원(2.03점)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반면 부산(2.51점), 대구(2.47점), 인천(2.44점), 울산(2.41점)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등 지역간 만족도의 차이를 보여줬다. 표준보육과정운영과 정보 제공 문제는 보육정책 영역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전체 평균 2.83점, 2.75점)가 높은 영역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제주(3.08점), 경남(2.97점), 충남(2.95점), 인천(2.92점), 충북(2.90점) 수요자들은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평가한 반면 전남(2.36점), 울산(2.64점), 전북(2.67점)은 성과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낮게 평가하였다. 정보 제공 문제에 대해서 경기(3.03점)와 광주(2.91점), 충북(2.90점)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전남(2.35점), 울산(2.53점)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다.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과 수요자 만족도

〈표 11〉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만족도

지역	구분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표준보육 과정운영	교사 교육지원	정보	평가인증	전체
서울	평균	2.73	2.13	2.33	2.76	2.56	2.70	2.98	2.60
	사례수	66	48	46	49	45	53	59	46
부산	평균	2.57	2.51	2.34	2.84	2.54	2.76	2.79	2.62
	사례수	47	35	32	38	39	38	42	32
대구	평균	2.83	2.47	2.24	2.88	2.58	2.83	2.88	2.67
	사례수	35	32	25	26	26	29	32	25
인천	평균	2.81	2.44	2.53	2.92	2.55	2.81	3.04	2.73
	사례수	67	45	43	48	47	47	54	43
광주	평균	2.56	2.12	2.04	2.87	2.45	2.91	2.56	2.50
	사례수	27	25	23	23	22	23	25	22
대전	평균	2.64	2.19	2.28	2.88	2.59	2.78	2.74	2.59
	사례수	33	27	25	26	22	27	31	
울산	평균	2.63	2.41	2.31	2.64	2.38	2.53	2.69	2.51
	사례수	35	27	26	25	26	32	32	
경기	평균	2.74	2.31	2.41	2.79	2.65	3.03	2.76	2.67
	사례수	35	32	29	28	31	29	29	
강원	평균	2.77	2.03	2.21	2.79	2.54	2.84	2.79	2.57
	사례수	44	39	34	33	37	38	43	
충북	평균	2.70	1.97	2.04	2.90	2.69	2.90	2.61	2.54
	사례수	40	33	26	31	26	31	31	
충남	평균	2.59	1.91	1.95	2.95	2.36	2.63	2.77	2.45
	사례수	29	22	21	21	22	24	26	
전북	평균	2.56	2.38	2.36	2.67	2.53	2.81	2.88	2.60
	사례수	18	13	14	15	15	16	17	
전남	평균	2.62	2.17	2.15	2.36	2.16	2.35	2.61	2.35
	사례수	29	23	20	22	25	23	23	
경북	평균	2.74	2.30	2.33	2.88	2.51	2.70	2.83	2.61
	사례수	42	30	30	33	35	37	40	
경남	평균	2.55	2.11	2.28	2.97	2.38	2.72	3.00	2.57
	사례수	42	35	32	34	34	32	36	
제주	평균	2.53	2.05	2.19	3.08	2.43	2.70	3.08	2.58
	사례수	30	22	21	25	23	23	26	
계	평균	2.68	2.22	2.27	2.83	2.50	2.75	2.83	2.58
	사례수	619	488	447	477	475	502	546	447
F값		.900	2.301**	1.330	2.284**	.946	1.780*	1.439	

1점: 매우 불만족스럽다 - 4점: 매우 만족한다

****P< 0.001 ***P< 0.01 **P< 0.05

2. 수요자 집단별 인지도와 만족도

보육 정책 수요자들은 보육료 지원정책(평균3.36점)과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평균3.25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가 높은 반면, 정부가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평균2.72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낮다. 특히, 시설장들과 부모들은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인지도의 차이가 있다. 평가인증제도(시설장 평균3.59점, 부모 평균2.90점), 보육료 지원(시설장 평균3.58점, 부모 평균3.13점), 인건비 지원(시설장 평균3.51점, 부모 평균2.50점), 교사 교육지원(시설장 평균3.24점, 부모 평균2.43점), 표준보육과정 운영(시설장 평균3.34점, 부모 평균2.53점),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시설장 평균3.21점, 부모 평균2.54점)운영비 지원(시설장 평균3.18점, 부모 평균2.26점)에 대해서 부모보다는 시설장의 정책 인지도가 높다¹¹⁾.

<표 12> 보육정책에 대한 수요자별 인지도

단위: 점,명

구분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표준보육과정운영	교사 교육지원	정보	평가인증	
시설장	평균	3.58	3.51	3.18	3.34	3.24	3.21	3.59
	학부모	329	328	324	328	327	326	328
부모	평균	3.13	2.50	2.26	2.53	2.43	2.54	2.90
	사례수	328	326	326	325	325	325	326
합계	평균	3.36	3.01	2.72	2.94	2.83	2.87	3.25
	사례수	657	654	650	653	652	651	654
F값	91.534****	327.490****	249.905****	210.541****	146.134****	158.355****	158.355****	

1점: 전혀 모른다 - 4점: 잘 알고 있다

****P< 0.001 ***P< 0.01 **P< 0.05

시설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시설장과 부모

11) 빈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조사대상이 된 보육 정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모르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데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11.6%,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51.6%,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65.7%가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46.1%가 교사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55.4%가 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46.7%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25.4%가 모르는 편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과 수요자 만족도

간의 인지도의 차이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알고 있는 정도가 가장 낮다. 반면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인지도도 다른 정책들 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시설장과의 인지도 차이도 가장 작다.

다음으로 정책의 추진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인건비 지원(전체 평균2.22점)과 관련된 정책이며 가장 높은 만족도는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표준보육과정운영¹²⁾(각각 평균2.83점)에 대해서 나타났다.

<표 13> 보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표준보육과정운영	교사 교육지원	정보	평가인증	
원장	평균	2.67	2.13	2.17	2.80	2.40	2.75	2.67
	사례수	314	306	292	291	299	304	312
학부모	평균	2.68	2.38	2.46	2.89	2.68	2.76	3.05
	사례수	305	182	155	186	176	198	234
합계	평균	2.68	2.22	2.27	2.83	2.50	2.75	2.83
	사례수	619	488	447	477	475	502	546
F값	036	15.602****	18.002****	2.853	19.929****	.076	34.935****	

1점: 매우 불만족스럽다 - 4점:매우 만족한다

****P< 0.001 ***P< 0.01 **P< 0.05

보육시설의 핵심적인 수요자 집단인 원장과 학부모 집단을 구분하여 정책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평가인증제도(시설장 평균2.67점, 부모 평균3.05점), 표준보육과정운영(시설장 평균2.80점, 부모 평균2.89점),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시설장 평균2.75점, 부모 평균2.76점), 보육료 지원(시설장 평균2.67점, 부모 평균2.68점), 교사 교육지원(시설장 평균2.40점, 부모 평균2.68점),인건비 지원(시설장 평균2.13점, 부모 평균2.38점), 운영비 지원(시설장 평균2.17점, 부모 평균2.46점)에서 부모들의 정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은 ‘보육시설의 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시·도 및 시·군·구는 표준보육과정을 보육시설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표준보육과정에 맞는 보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육아정책연구(제2권 제2호)

두 집단은 보육료 지원, 표준보육과정운영과 보육시설 관련 정보 제공 영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그 외 정책들에 대해서는 만족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연령집단별 보육내용을 연령, 발달, 개인차 등 각각의 수준으로 나누어서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 표준보육과정은 원장이나 학부모들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높다.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도 중앙보육정보센터나 지방보육정보센터 모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학부모들의 경우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단연 높았다(3.05점). 이로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평가인증 사업은 학부모들에게는 어느 정도 정책 효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재무·회계관리(2.88점)와 행정관리(2.82점)에 대해서도 원장들보다(각각 2.66점, 2.67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다.

<표 14> 보육정책에 대한 시설유형별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표준보육과정운영	교사 교육지원	정보	평가인증	
지원시설	평균	2.75	2.34	2.36	2.91	2.58	2.83	3.04
	사례수	306	237	222	239	232	248	275
미지원시설	평균	2.61	2.11	2.19	2.76	2.43	2.68	2.62
	사례수	313	251	225	238	243	254	271
합계	평균	2.68	2.22	2.27	2.83	2.50	2.75	2.83
	사례수	619	488	447	477	475	502	546
F값	6.665*	13.294****	6.745**	9.894***	5.445**	6.753**	46.720****	

1점: 매우 불만족스럽다 - 4점:매우 만족한다

****P< 0.001 ***P< 0.01 **P< 0.05

이와 같은 만족도는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로 구분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모든 영역에서 인건비 지원시설 원장과 학부모들이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지원시설 원장과 학부모들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

도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3.04점)는 반응을 보여줬고 표준보육과정 운영(2.91점), 과 시설과 관련된 정보 획득(2.83점)등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미지원시설 원장과 학부모들은 표준보육과정운영(2.76점)과 시설과 관련된 정보 획득(2.68점), 보육시설 평가인증(2.62점)이 다른 정책 영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영역이지만 지원시설 원장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수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인건비 미지원시설 원장과 학부모들은 인건비 지원정책에 대해서 모든 정책영역 중 가장 만족도가 낮았고 그 정도 역시 다소 불만족스럽다(2.11점)는 정도이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보육 정책이 거주 지역 정책 특성에 의해서도 규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역을 초점으로 보육 정책과 만족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만족도 조사(2008년 육아정책개발센터 과제)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서 확인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보육시설 이용율은 전국 평균이 37.8%이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는 31.9%(인천)에서 57.5%(제주)로 이용율의 차이가 있다. 시설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교사 및 시설장 수 대비 인건비 지원 시설 비율은 제주(44.6%)가 가장 높고 경기(11.8%)가 가장 낮다. 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원아수의 비율 역시 제주(51.8%)가 가장 높고, 인천(15.1%)이 가장 낮다.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예산의 경우도 지역 간 격차는 큰 편인데, 서울의 경우 전체 예산의 83.29%를, 15개 지방자치단체 경우 전체 보육 예산 중 40.5%에서 58.3%까지 부담한다.

정책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는 첫째,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 둘째,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보육 과정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인 표준보육과정 운영 및 교사 교육, 셋째, 보육시설의 질관리 방법의 하나인 평가인증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만족도 측정의 결과 보육시설 평가인증(2.83점)이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다. 보육 과정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 간에는 상반된 만족도를 보여줬는데, 표준보육과정 운영(2.83점)

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육과정 운영의 주체인 교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2.50점)에 대해서는 상대적 만족도 수준이 낮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준 영역은 인건비 지원(2.22점)과 운영비 지원(2.27점)에 대해서이다. 이상과 같은 경향은 현재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재정적 상태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영유아에 대한 보육활동에 대해서는 상대적 만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만족도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는 인건비 지원 정책, 표준보육 과정운영과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시설유형별로 인건비 지원시설 원장과 학부모들이, 수요자 집단별로는 원장과 학부모 집단 중에 학부모들의 정책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직접적인 시설 운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은 시설운영과 관련된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원장들에 비해 만족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역간 재정배분의 격차와 시설 유형간 만족도의 차이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 누구에게나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보게 한다.

첫째,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및 재정 투입액의 차이는 지역간 편차도 나타나지만 더욱 중요하게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전반적으로 전체 보육시설 중 인건비 지원시설의 비중이 크고 이와 같은 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비중이 큰 지역에서 전반적인 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정책 만족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갖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수요자의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정책 영역들 중에서 평가인증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시도로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것은 보육시설의 민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와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원래의 의도를 일정부분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가인증에 대한 만족도는 인건비 지원시설 학부모, 인건비 지원시설 원장, 인건비 미지원시설 학부모, 인건비 미지원시설 원장 순서이다. 학부모들은 평가인증 제도로 인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고 하나, 이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시설 원장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은 향후 평가인증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중해(2004). 보육재정의 공공성 확대 방안. 보육재정의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회자료집,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주최.
- 문선화(2005). 한국의 보육료 제도와 정부의 재정지원 체계.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집.
- 백선희(2005). 우리나라 보육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재구조화. **한국사회복지학**, 57(1)
- 여성가족부(2005). 2004년도 보육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제2권: 보육시설 실태조사보고.
-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 여성가족부(2008). 보육사업안내.
- 유희정·김은설·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표갑수(2005). 한국 보육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 00
각 시도별 2008 특수시책사업현황.

- 논문접수 2008년 10월 20일 / 수정본 접수 11월 26일 / 게재 승인 12월 12일
- 교신저자: 최진 ,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connectj@kicce.re.kr

ABSTRACT

Childcare service Program in local governments

Yoo, Hee jung

Choi, Jin

In this study, budgets and projects classified by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in order to analyze the use of childcare services classified by 16 local governments while examining the satisfaction degree of 330 childcare center directors and 328 parents of children in childcare facilities. Within the current 2008 overall childcare budget, the local governments are inputting from 40.5% to 83.2% of their total childcare budget. Regarding childcare services of such local governments, the satisfaction degree of financial support of childcare facilities, information offered on childcare services, expertise of childcare courses, and accreditation systems for childcare facility evaluations were estimated. Following, its resul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region, facility patterns, and customers. Additionally, differences in the satisfaction degrees were large according to the approval of personal expense support centers while the gap in satisfaction degrees on the policy for center director and parents appeared to be great.

Key Words: local governments, childcare budget, degree of satisfaction